

# 政府出捐研究機關의 役割과 政策研究



박 장 선(KIMM 신교통기술연구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학사)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기술경영학(석사)  
 '71 -'8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74 -'76 국무총리직속 장기자원대책(위) (파견근무)  
 '80 -'83 한국원자력연구소  
 '94 -'95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기술협력위원  
 (파견근무)  
 '84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기술정보실장, 서울사무소장,  
 연구정보지원부장 역임)

## 1. 머리말

우리가 이공계 政府出捐研究機關의 역할을 논할 때 주관심사로 제기되는 것은 <研究開發>에서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또한 研究開發에 있어서도 소위 3대 研究圈域으로 구분되고 있는 대학, 산업계 그리고 研究機關이 각각 어떤 역할을 달리 할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우수한 과학자들을 유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特定分野의 과학적, 공학적 지식을 전문적으로 研究開發해냄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해 國家經濟와 社會의 발전을 이루어 간다는 政府出捐研究機關의 설립배경을 고려한다면 <研究開發>은 가장 중요한 고유기능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각 研究機關別로 연구대상분야의 특성화를 통해 연구기관간 혹은 대학이나 기업과의 중복연구를 피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적 研究開發資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도 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막대한 운영비와 연구비를 국가예산에 반영시켜 지원하고 있는 出捐研究機關은 그 역할을 研究開發에만 치중하여 논의되는 관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우기 과거 기술 도입에 거의 의존하던 산업계가 생존을 위한 經營戰略으로서 自體技術開發力 향상을 위해 우수 연구요원을 유치하고 연구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대학들 역시 과거와는 달리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政府出捐研究機關들의 역할은 研究開發에서

의 새로운 方向毛色과 함께 민간기업이나 대학의 기능으로써 어려운 국가적 또는 공적 기능들, 즉, 과학기술에 관한 政策, 政報, 平家, 安全, 豫測(전망), 國家研究프로젝트企劃과 管理, 연구결과의 産業界擴散, 弘報, 外交, 國際協力 등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의 비중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政府出捐研究機關에서의 이러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계속하여 제기될 것이며 政府出捐研究機關은 이들 과제에 대한 政策代案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왜 과학기술에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技術經濟의으로 일본을 극복하려면(또는 특정분야에서 세계 제일수준의 技術經濟力을 달성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정치인들에게 國家豫算編成 責任者들에게 국민들에게 논리적인 方法論과 對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政府出捐研究機關의 몫이며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政府出捐研究機關의 운영을 맡고 있는 機關長들 역시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된 연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각 政府出捐研究機關에서 政策研究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그룹들은 국가적 관점에서 研究機關이 왜 필요한지, 정부의 政策方向과 研究機關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유지하고 그 代案을 연구하여야 한다.

## 2. 政策研究의 特徵과 그 役割

日本の 경제와 사회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논의할 때, 일본의 수많은 研究機關들이 끊임없이 연구발표하고 있는 政策報告書와 이를 政策目標와 수단으로 받아들여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일본 특유의 조직화된 시스템이 대단

히 중요한 배경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과학기술 관련분야에 있어서도 日本은 매년 2만여건의 각종 政策報告書들이 발간되고 있다. 國立研究機關을 비롯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公共研究機關과 政府政策補助機構, 수많은 단체(工業會, 協會, 技術團體, 學術團體, 組合 등), 民間研究機關, 大學研究所 등에서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자체의 필요성에 따르든 또는 외국용역이든간에 각종 調査分析報告書, 技術豫測資料, 특정분야의 戰略研究報告書, 技術評價報告書, 각종 統計資料 형태로 발간되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기관이 일본에서 발표되는 이러한 보고서를 그대로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대한 科學技術現況 分析資料를 일본의 研究機關을 통해 얻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책연구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구 또는 조직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려 하거나 발전적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 분석, 평가, 미래예측, 최적해의 導出, 그리고 方法論研究 등 일련의 연구활동을 의미한다.

학문적으로 볼 때, 정책연구는 사회과학분야에 속한다. 독립된 학문분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경영학의 한 범주로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과학기술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확산되어감에 따라 일부대학에서는 科學技術政策論, 技術革新, 技術豫測/評價, 技術移轉論, 研究管理論 등을 技術經營學이라는 學問分野에 편성시켜 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科學技術分野에 관한 政策研究는 그 연구대상을 과학기술에 두고 있지만 研究方法論은 社會科學的이며, 연구의 내용은 경우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그리고 교육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産業政策과 깊이

연관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 企業經營에 있어서나 國際經濟의 경쟁양상이 技術競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國家的競爭力確保 次元에서, 기업은 존립을 위한 經營戰略으로 科學技術력을 경쟁자보다 먼저 더 많이 보유하려는 정책과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과학기술에 관한 政策研究需要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政策研究는 몇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문제해결을 위한 接近方法은 社會科學의이지만 政策研究組織과 연구원은 과학기술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기본지식의 바탕 위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우리의 경우, 社會科學(주로 經濟學, 經營學) 전공자들이 중심이 되어 科學技術問題를 지나치게 經濟論理나 企業經營論理로 파악하려 하거나(지금도 이러한 경향이 지배적이다), 巨視的으로 접근하려 했기 때문에 정부내에서 科學技術政策의 위상이 흔들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일부 역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도로건설을 위한 금년의 투자는 내년에 새로운 아스팔트도로에서 자동차를 질주하게 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금년의 투자는 10년후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쟁력으로 나타난다. 社會科學的 側面에서 볼 때 評價指標는 定量的이지만 科學技術의 경우는 그 속성이 定性的일 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둘째, 政策研究가 지향하는 목표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적 과제에 대해 政策決定者로 하여금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이다. 즉, 연구를 통해 最適解(Optimum Solution)를 구하는 일이며, 그 해는 한개 이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예상되는 변수를 고려한 다음 가능한 여러 代案들(Alternatives)을 도출하고, 이들을 서로 비교하여 정책결정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시된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연관되는 여러가지 外環境變數(주로 경제, 사회적 변수 등)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느냐가 연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政策研究科程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관련되는 집단들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의 이루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단기간내에 대안을 도출하여 실행되었던 정책들이 施行錯誤를 일으킨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째, 政策研究의 先導的·先行的 研究特性이다. 모든 정책연구는 과학기술에 관한 어떤 정책 결정사안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주기 위한 연구행위이다. 이 연구 결과가 政策決定者(정부의 정책결정자, 기관의 경영책임자 그리고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조직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를 모두 포함시킨다)에 의해 정책목표 또는 수단으로 채택될 경우 이를 둘러싼 주변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관련자들에게 이해관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정부나 각 연구기관이 연구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려 할 때 사전에 깊이있는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컨센서스를 이루는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연구는 분명히 先導的이다. 또 研究評價에 있어서도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評價方法論과 評價基準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책연구의 先行的 特性이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이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소홀히 이루어져 왔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네째, 政策研究分野는 研究對象과 研究方法論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거시적 접근이 필요한 연구테마가 있는 반면 미시적 접근이 요구되는 과제들이 있다. 미리 결론이나 목표를 정하고 난 후 이를 검증하거나 또는 합리화시키는 下向式(Top-down)接近方法이 있는가 하면 미시적 연구과정을 거쳐 결론이나 목표를 도출하는 上向式(Bottom-up)接近方法을 이용하기도 한다.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국가제도의 새로운 도입과 개선, 국가적 과학기술 시스템 형성과 조정, 국가의 장기적 과학기술 비전(과학기술 기본계획),

각종 事業의 導出과 調整, 于先順位の 결정. 資源의 合理的 配分, 國際科學技術協力, 國家科學技術情報시스템, 研究開發事業의 企劃과 管理, 研究評價, 技術豫測, 技術評價, 技術移轉 및 擴散, 科學技術教育 등 등에 관한 연구테마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政策研究는 단순히 정부지원을 위한 보조적 연구대상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政府出捐研究機關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 3. 政策研究現況과 主要課題

#### 3.1. 政策研究의 位相

1966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초기 수년간에 수행한 일들은 주로 과학자를 유치해 오는 일과 정부와 연구소가 앞으로 國家科學技術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일이었다.

초기 유치과학자들을 비롯한 연구원들은 우선 우리나라의 기술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技術分野別 研究方向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소위 政策研究爲主의 조사연구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科學技術政策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70년대 重化學工業化와 技術開發戰略研究도 수행되었다. 또한 최초로 미래의 산업과 기술 그리고 사회의 모습을 예측해 보기 위해 Delphi 방법으로 당시로부터 30년 뒤인 서기2000년의 한국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70년대에 들어와서도 KIST의 政策研究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연구경험을 쌓은 정책연구원들(당시 KIST의 기술정보실과 경제분석실 소속 연구원)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설립된 여러 專門研究機關에 진출하여 관련기술분야의 정책수립과 소속기관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현재 모든 이공계 政府出捐研究機關에는 어떤

조직형태로든지 간에 정책연구그룹들을 보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STEPI)는 정책연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운영중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연구센터역할을 하고 있는 STEPI는 짧은 운영기간(약 9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수많은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國家研究事業의 企劃·評價·調整機能을 수행해 왔다. 또한 정부예산에 의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科學技術 國際協力事業을 총괄하여 지원하고 있다. STEPI는 그간 많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機關運營의 獨立性問題이다.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STEPI역할의 특성상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기관에서부터 獨立機關으로의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機關의 役割에 관한 문제이다.

STEPI는 國家科學技術 政策研究機關으로서의 역할수행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부처 지원중심체제를 지양하고 범부처적 科學技術問題를 대상으로 하는 역할과 기능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運營體制가 발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專門研究機關들과의 協力關係 설정문제이다.

STEPI는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고유업무, 즉, 研究開發事業의 評價業務와 國際協力事業에서는 專門研究機關들과 업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STEPI가 정책연구에 있어서 센터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專門研究機關들의 政策研究 그룹과 어떤 협력관계도 유지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STEPI를 위해서도 專門研究機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STEPI는 정책연구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政策研究分野의 機能強化 필요성이다.

STEPI는 현재 주어져 있는 기능 중에서 정책

연구분야를 상대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가 특성상 당장의 科學技術政策·行政支援業務에 기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은 여전히 STEPI의 중추적 기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政府出捐 專門研究機關들의 정책연구그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우선, 조직과 연구인력면에서 연구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몇 개의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부의 형태로 해당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비교적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는 政策研究室, 技術支援室, 技術動向分析室, 또는 企劃政策室 등의 명칭으로 불과 3-5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던가 기관장의 업무보조, 또는 연구부서 지원성격의 업무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專門研究機關에서의 政策研究組織과 기능은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해당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려 할 때 정책연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경우에 정책연구그룹은 조직이나 연구인력이 강화되고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조직보다는 機關長個人的 판단과 역량에 의존하는 경우에 정책연구기능은 위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전문기관이 研究企劃機能과 政策研究機能을 유사한 업무영역으로 취급하여 같은 조직 내에 두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해당기관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정책연구그룹에 잘못 일임하는 연구기관이 많다. 機關의 發展界劃은 당연히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기획실)이 주관하여야 하며, 이 때 정책연구그룹은 기획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 또는 연구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3.2. 政策研究그룹의 研究活動

STEPI를 제외한 專門研究機關 소속 政策研究그룹들의 研究財源은 주로 정부와 소속연구기관

이다.

과학기술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예산 속에 研究企劃·評價研究費를 배정해 놓고 있다. 이 연구비는 정책연구그룹들이 정부에 직접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요 研究財源이다. 그러나 연구과제가 정책적으로 조정될 뿐만 아니라(정부의 지정과제인 경우가 많다) 어떤 특정 연구사업을 위한 事前企劃評價研究의 성격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연구그룹이 이 재원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외에 각 연구기관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배분하고 있는 연구재원(기관고유 연구사업비)이 있다. 일부 연구기관의 정책연구그룹은 이 연구비를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재원 역시 研究開發事業을 위한 基盤研究性格을 띠고 있으므로 政策研究財源으로 활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연구예산 외에 政策研究費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구기관의 自體研究費가 있다. 이 재원은 각 연구기관이 機關自體의 발전을 위해 수탁연구예산 등을 절약하여 마련해 놓은 소액예산으로서 정책연구그룹의 주요 연구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연구비는 성격상 해당연구기관을 위한 과제에 주어진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관련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수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극히 드물다.

이와 같이 전문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연구그룹의 研究財源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연구기관이 政策研究分野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비를 배분하지 않는다면 정책연구그룹의 存立自體가 有名無實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政府出捐研究機關의 政策研究活動을 강화시키려면 우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연구비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STEPI를 제외한 이공계 政府出捐研究機關들의 政策研究活動은 정부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확보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

기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專門研究機關에서의 政策研究活動은 대체로 기관장을 위한 단기적인 特定作業, 研究機關의 發展界劃 總括, 연구부서들의 初期研究活動 支援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이 업무의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관련 전문기술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여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여러 과제, 연구기관 차원의 장기적 대응전략 연구과제들은 연구활동의 주류를 이루지 못한다.

정부와 각 연구기관이 정책연구그룹으로부터 政策研究能力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情報提供能力을 기대하려면 이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再評價와 支援이 뒤따라야 한다.

### 3.3. 政策研究를 위한 몇가지 代案

다음은 전술한 정책연구의 위상과 연구활동에 있어서의 여러 과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들이다.

첫째, 정부는 專門研究機關의 정책연구그룹을 관련기술분야별 政府政策支援을 위한 연구그룹으로 발전시키고 정부의 政策研究事業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구기획·평가연구사업을 확대운용하던가 또는 STEPI 연구사업중에 전문연구기관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연구비를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 研究事業이 바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연구의 제공과 각 專門研究機關들의 올바른 研究方向 및 目標의 설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研究事業에서는 분야별 科學技術 정책과 國家研究開發시스템, 政府出捐研究機關의 역할 등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정부의 中長期的인 政策樹立에 필요로 하는 연구가 전문기술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예컨대, 機械·部品類의 기술경제적 開發競争力 부족이 經常收支赤字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기계(연)은 지속적으로 그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技術政策代案을 연구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機械·部品の 國產化政策에 기여하고 기술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기계(연)의 중요한 役割이자 責任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STEPI와 각 專門研究機關 政策研究그룹과의 研究協力關係를 증진시킨다. 현재는 두 채널 간의 협력고리가 이어져 있지 않다. STEPI는 자신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도 專門研究機關과의 共同研究, 情報交流, 共同事業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專門研究機關의 정책연구그룹을 적절히 활용하면 쌍방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STEPI는 정부에 이 사업을 반영시켜 추진한다.

세째, 專門研究機關들이 政策研究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기관들은 정책연구그룹의 기본적인 研究活動을 支援해줘야 한다. 자체연구비 또는 기관고유연구사업비를 배정을 통해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특정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도록 하던가, 국내외의 技術政策動向分析, 技術水準評價, 産業現況分析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정책연구그룹의 政策情報能力은 이러한 연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갖춰질 수 있다.

네째, 정책연구그룹의 研究要員 補充과 원활한 研究活動展開를 위한 방안으로 기관내 연구인력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研究員充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책연구그룹의 경우는 기초연구요원만을 두되 연구과제 중심으로 研究部署所屬의 研究人力活用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신규채용연구원, 특히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근무하게 되는 연구원들을 일정기간 동안(6개월 전후) 정책연구그룹내에서 국내외 技術現況分析 등의 調査研究課題를 수행케 한 다음 所屬研究室로 귀환시킨다. 또 하나는 연구경력을 많이 쌓아온 일정 연령 이상의 연구원들을 정책연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특히 專功分野에서의 研究方向設定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책연구그룹들이 自體發展努力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지원하기 이전에 먼저 정책연구그룹이 대안을 강구하여 이를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연구기관 정책연구그룹들이 공동으로 연구과제 및 특정사업(예:국제심포지움)을 발굴하여 정부에 신청하는 共同研究事業推進, 정기적인 共同研究發表會開催, 정부에 대한 政策資料提供과 政策建議, 대학 및 기업의 관계전문가그룹과의 研究協力強化(연구수행과정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外國 專門機關·專門家들과의 交流擴大와 共同研究推進 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 4. 맺는말

수년전 科學技術處長官은 당시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出捐研究機關의 정책연구그룹리더들을 과학재단 서울사무소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일이 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政策課題로서 關係部處가 합의하여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요구하였다. 여러분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그 의견들은 장관이 기대하는 참신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 원론적인 정책이슈에 관한 것들이었다. 우리들은 여기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으려면 정책연구가 目標·目的指向의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이를 위한 研究費를 支援해 주면 계속하여 좋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建議하였다. 장관은 이 건의를 받아드리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부처의 주요간부들이 배석한 자리에

서 이루어진 장관의 공언이었기 때문에 기대는 컸다. 그러나 장관은 그 후 오래지 않아 퇴임하였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쉬운 일이었다.

지난 수년 동안 이공계 政府出捐研究機關들은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고 연구기관별로 수차례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연구기관들에 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연구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했다고 선언한 바도 없다. 고민하고 작업이 이루어졌던 이슈가 그 속성상 선을 긋기가 곤란한 <研究開發>에서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정부가 어떤 기회에 이러한 역할논의를 다시 제기할 것이며 연구기관 특히 자신들이 연구 이외의 일로 또 한차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科學技術은 經濟 뿐만 아니라 政治, 外交, 國防, 教育, 社會福祉, 資源, 에너지, 環境, 國土建設, 交通, 通信, 農水産 등 국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政策手段으로 그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더우기 UR 이후 WTO체제로의 이행에 따르는 치열한 科學技術開發競爭과 OECD가입 등 변화하는 國際環境에서 해결해야 할 科學技術政策課題들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응방안들은 대부분 경제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理工系 政府出捐研究機關들의 政策研究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政策樹立에 유익한 우수한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研究與件을 造成해 줘야 한다. 이는 政府出捐研究機關으로 하여금 그 役割을 增大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代案이다.